

가맹분야 갑질 등 불공정관행 점검 공정위, '필수품목 이행 실태' 파악

1.2만개 가맹점 대상 서면 조사

종류·공급가격 기재 의무화 점검
가맹사업법 개정안 협의 규정 검토
10월까지 조사…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개선된 필수품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 등 제도 개선 논의와 맞물린 현안들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에 걸친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모바일, 이메일, 면접 방식 등을 통해 진행되며,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와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가맹금 현황, 정책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를 의무화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고,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지 등 현장의 체감도와 구체적인 거래 관행을 정밀하게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단체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사 결과는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정위는 “단체 구성률과 가맹본부의 협의 응답 여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단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가맹 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02개, 가맹점 수는 3.4% 증가한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브랜드 수는 1년 새 52개가 줄어 1만2377개로 소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표 의무가 있으며, 올해 12월 중 발표되며, 직권조사 척수 여부, 제도 보완,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기안전공사, 지역인재·기술 동반성장 박차

전북대와 '글로컬대학30' 맞손 연구인력 상호 교류·학술회의 협력 정부 교육정책 지원·지역소멸 대응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전기안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전북대학교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 공동연구사업 수행 ▲ 연구인력 상호 교류 ▲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효성 있는 협업을 위해 양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설치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 5번째)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왼쪽 6번째) 등 관계자들과 지난 16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도 추진된다. 양측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교수진에게는 실증 연구의 장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혜택의 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최우선”

중부발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5일 ‘2025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및 협력사 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이영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본사와 사업소의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발전소 경상정비를

수행하는 주요 협력기업인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랜트 ▲수산인더스트리 ▲한진 ▲상공에너지 등 7개사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 오아시스’ 제도 안내 △협력사에 대한 의견 수렴 △안전 활동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재해예방 활동 우수 협력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 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산인더스트리 보령사업소(최우수상)와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소(우수상)에 대한 특별 포상을 시행했다.

이영조 사장은 회의에서 “최근 폭염으로 인한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취약 하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중호우 대비 농업인 안전 관리 강화

농진청, 재해대책 본격 대응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침수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각 농가에 작물별 생육관리 기술 등의 전파에 나섰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서창교 인근 녹이 침수돼 있다.

/뉴스

농진청은 지난 15일 농촌지원국의 권철희 국장 주재로 호우 대비 점검 영상 회의를 가졌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참석해 지역별 사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이번 호우로 농업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17일 오전 4시를 기해 중앙 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현장동향 파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가입된 농업인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농장 단위(30×30m)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휴

과수의 경우, 침수된 과수원에 물길을 만들어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파주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중수본, 오늘까지 이동중지 명령

올해 국내 사육돼지에서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양돈농가 내 돼지열병 발생은 총 53건으로 늘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중수본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 양주, 김포, 고양)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정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4200명 투입해 피서지 무질서 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계곡 등 순찰 강화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한시적

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